

자립형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1. 서론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다. 출범 이후 수많은 정치적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가공할만한 권력과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분권/분산/분업형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국정과제의 실천이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돌이켜 볼 때, 지방문제를 백안시했던 정권은 없었다. 모든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균형발전 실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고,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수도권 정비계획, 거점개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정주생활권 개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서해안개발사업계획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권이 마감될 무렵 ‘불균형의 정도를 출범 당시보다 좁혀 냈다’고 자랑스럽게 치적을 내세울 수 있는 정권이 과연 있었던가. 우리는 결코 그런 정부를 가진 적이 없다.

참여정부의 지방정책은 출범 당시부터 기존 정부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했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역대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정 되었던 제약 및 장애요인을 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참여정부의 전략이 기존의 정부전략에 비하여 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략 내용의 차별성 때문이다. 참여 정부 전략의 핵심은 지역내부의 역량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동력 - 즉 지역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내생적·자립적 지역발전>을 달성해 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정부의 지방화 전략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와 시혜에 근거한 <외생적·타율적 지역발전 전략>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지역별 RIS의 구축전략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갖춘 세력(혁신주체)들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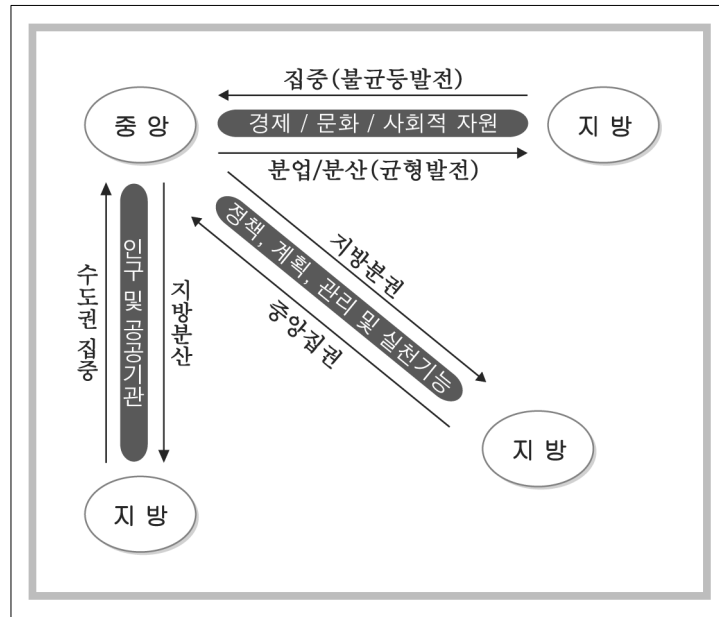
호 교통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역량을 발현케 함으로써 특화된 발전을 도출해 낸다는 자주적 지역발전관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 전략의 계획수립과 실천과정을 독점해 왔던 기존의 정부기구(governmental actors / 지방정부, 국책연구소, 친정부기업, 관변단체 등)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민간기구(non-governmental actors / 대학,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언론, NGO 등)들의 참여까지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지역단위의 정치적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 자립형 지방화의 성공조건 : 지방분권과 RIS 구축

1) 제도적 조건 : 지방분권의 확립

자립적 지방화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조건은 <지방분권>의 확립이다. 지방분권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또는 지방정부)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그림1>에서 보듯이 (1)정치적 분권, (2)경제적 분업, (3)사회적 분산이 그것이다.

정치적 분권은 중앙정치의 패해를 극복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의 실시 등이 대표적인 조치이다. 행정분권, 경찰자치, 교육자치의 실시 등도 이 영역에 속한다. 경제적 분업은 수도권과 지방이 경제적 생산의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적 조건의 마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 집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동화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적 부분에 대한 강제적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치가 세계 개혁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산이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의미한다. 특히 7000여개가 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그림 1> 지방분권의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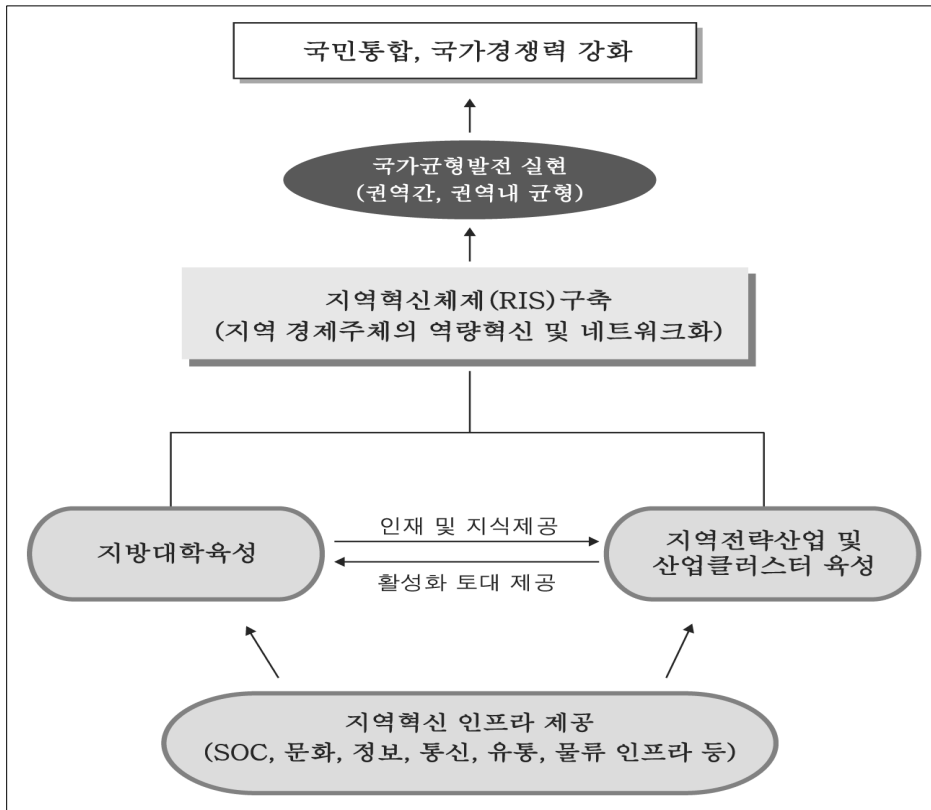
2) 내생적 조건 : RIS의 구축

정치적 분권, 경제적 분업, 그리고 사회적 분산이라는 제도적 조건의 구비가 곧 자립형 지방화의 달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의 구비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이를 추동해 낼 수 있는 충분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곧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내생적 시스템 - 즉 지역혁신시스템(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지역단위별 RIS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신정부 구상의 핵심은 지방의 자생력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방이 자주적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각 지역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RIS 구축을 통해 완성된다.

RIS는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체, 시민사회, 지방언론, 연구소 등의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생산과정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주도해내는 시스템

이다. RIS는 지역 내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과 공동학습을 가능케 해 줌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효과적이라는 발전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서구의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이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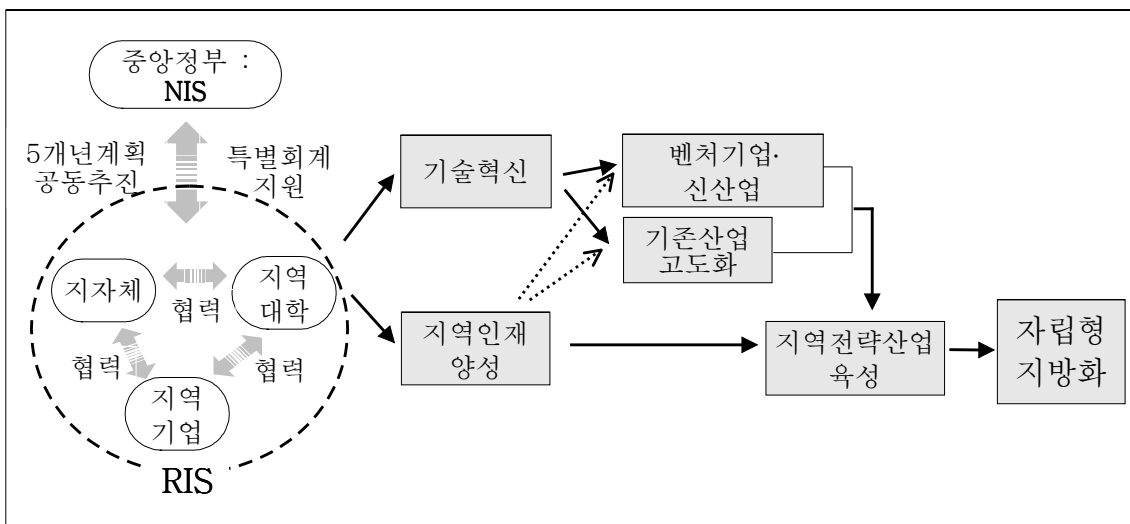
<그림 2> RIS 구축과 균형발전의 개념도

RIS는 본래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 국가혁신체계)의 하위개념이다. NIS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현대산업기술의 시스템적 성격의 강화, 그리고 세계화의 확산과 같은 급속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적 체제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룬드발(Lundvall, 1992), 넬슨(Nelson, 1993), 에드퀴스트(Edquist, 1997) 등에 의해 이론체계가 확립된 NIS는 진화경제론적 입장에서 기술혁신과정의 상호작용과 지식의 집단학습을 강조한다.¹⁾ 이러한 영향은 지역단위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1) 지금까지 기술혁신은 대기업의 연구소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모델은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의 분리, 그리고 기초, 응용, 생산, 연구의 분업화를 전제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모델을 선형모델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은 상호작용모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상호작용모델은 생산과 연구기능의 상호협력, 산학관(기업, 대학, 정부)의 교호작용, 기업간의 네트워크

학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로 이어졌다. 지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나름의 혁신 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박용호, 2001 : 275-280).

RIS라는 개념은 유럽의 학자들이 비교적 엄격한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들에 따르면 RIS 구축이란 <세계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기반경제의 확산 및 첨단기술(high technology)의 발전에 기초한 지역발전(및 국가발전)을 가능케 해 줄 지역 나름의 혁신적인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이라는 의미로 정의된다. 따라서 RIS는 지역(지방)에 첨단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잠재적 기반여건(예컨대, 세계적인 대학, 첨단 연구소, 첨단 기업 등)이 갖추어진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무런 부담없이 정책 개념으로 바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여건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지방산업은 하이텍(high-tech)과는 거리가 먼 낮은 차원의 전통 제조업 또는 포디즘적 산업이 주종을 이룬다. 대학 및 연구소의 잠재적 능력도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RIS 개념을 유럽적인 좁은 의미의 정책용어로 사용할 수는 없다. 참여정부의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RIS 개념은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모든 지역 및 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정책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김영정, 2004, 103). 이와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RIS와 자립형 지방화의 관계를 그림으로 밝힌 것이 <그림3>이다.



<그림3> RIS와 자립형 지방화

(공급기업, 고객기업, 경쟁기업간의 협조) 등을 통한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집단학습이 기술혁신의 기반을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론이다(박삼욱, 2001 : 244).

3) 지방분권과 RIS의 구축의 전략적 관계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자립적 지방화의 제도적 조건을 <분권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내생적 RIS 구축전략은 <특성화/ 균형화 전략>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양자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두고 최근에 여러 관점들이 충돌하고 있다. 소위 <지방분권 우선론>, <균형발전 우선론>, <민주적 지방자치(지방정치 혁신) 우선론>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분권운동 (넓은 의미의 ‘지방 살리기 사회운동’)의 전략적, 실천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 우선 추진론>은,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분권화전략에 앞서 이를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간 대립과 갈등(신지역갈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지역갈등이 출현할 경우, 보수주의자들(중앙집중의 수혜자들)에게 <분권 무용 또는 불가론>의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정권한의 강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중앙정부 역할 강화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분권우선론은 주장한다.

반면 <균형발전 우선 추진론자>들은 무엇보다도 <분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방분권의 최종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의 성취라고 본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의 도구요, 전제조건이라고 규정한다. 지방분권 도구론은 특히 농업적 후발지역(호남/중부 지역)의 관료, 언론 및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도구론은 지역간 성장격차를 교정하지 아니한 채 추구하는 분권은 기존의 격차를 더욱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권 우선론>이 대세로 받아들여질 경우 낙후 지역주민의 동원 및 운동역량 강화는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주적 지방자치 우선론>은 지방내부의 정치혁신이 지방살리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이 공론장의 주역으로 등장할 경우, 지역 내부혁신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경계한다. 특히 권한이양의 문제나 지역간 균형달성의 문제가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상과 타협의 문제로 전략할 경우, 책임은 지방에 넘기면서 권한은 이양하지 않는 왜곡된 분권모델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럴 경우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궁극적으로 지방정치

혁신의 달성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정치 혁신>의 문제가 지방정책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입장은 나름대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방살리기 3대 과제(지방분권의 실현, RIS의 구축, 지방정치 혁신)는 상호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상호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상보적인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지방분권의 실현은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키 위한 필요조건이며, 내생적 조건으로서의 RIS 구축은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정치 혁신의 문제는 RIS구축과 지방분권 실현의 문제와 중첩적 인과적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살리기 3대 과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시에 추진될 때에 비로소 높은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얻을 수 있다.

2. 참여정부 이전의 RIS 구축 전략 : 비판적 고찰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RIS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을 지방정책의 기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정부는 지방대학을 사업주체로 삼고 기업,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의 조성, 창업보육, 과학기술중진, 정보통신사업지원사업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모두 <탈공업화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단위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 그러나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같은 기반여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채 시도된 서구모델의 실험은 태생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분권의 고도화를 일찍이 달성한 서구 국가의 RIS 모형은 <지방주도-중앙후원>형의 모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중앙주도-지방후원>형의 RIS 모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RIS 구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둘째, RIS 구축의 기본조건으로서, 분권의 제도화 만큼이나 중요한 조건

2) 산업클러스터(cluster)의 개념은 포터(Porter, 1990)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분야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전문화된 공급자,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산업, 관련기관(대학, 상의, 중개기관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Porter, 2000 : 16)”되어 있는 일종의 산업공동체를 클러스터라고 정의한다. 그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한결같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박삼욱, 2001: 246).

이 지방대학의 육성이다. RIS 구축의 포괄적 역할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는 지방대학육성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셋째, RIS 모델의 다양성이 전혀 없었다. 지역별로 특성이 없는 모델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뜻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모든 모델은 한결같이 <탈공업화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을 탈공업화산업의 기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탈공업화 산업은 통상 <지식산업>으로 불리운다. 이의 신비화를 부추기는 탈공업화론자들은 세계경제가 이미 제조업 중심경제에서 탈공업화산업 중심의 경제로 이행하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탈공업화산업이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는 중추역할을 맡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영역을 지원하는 지역단위의 혁신체제(RIS)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서구사회의 경우 타당한 논리로 받아 들여 진다. 많은 나라들이 탈공업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포디즘적 산업과 전통산업을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심축의 하나로 삼고 있고, 그러한 산업과 연관된 영세 협력업체들이 지방에 산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지방의 경제주체들을 네트워크하는 다양한 RIS 모델의 개발이 당연히 요청된다. 그러나 기존 정부는 이점을 간과했다.

<표 1> 참여정부 출범 이전의 지역혁신지원사업

유 형	주관부서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주체
지역기술혁신 지원사업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대학, 지자체 지방중소기업 교수, 연구원	대학/지자체 지역대학 대학(29개)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벤처창업타운조성사업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중진공 중진공/지자체
	과학기술부	과학연구센터(SRC) 공학연구센터(E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첨단기술사업화센터 신기술창업지원단	기초과학 재료, 기계공 학 지방산업체 KAIST 예비창업자	대학(26개) 대학(35개) 대학(37개) KAIST KAIST
	정보통신부	한국SW지원센터지원사업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SW지원센터 대학

자료: 김영정(2002, 3)

넷째, 기존 정부는, 대체적으로 보아, RIS 구축의 공간적 기본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삼은 듯 하다. 기초자치단체의 내부역량을 키우는 구체적인 전략이 특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광역단위의 RIS는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초단체별 RIS의 구축은 정의적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이 점을 소홀히 했다.

왜 기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탈공업화 산업 중심의 획일적인 RIS구축 및 전략산업육성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려 했을까? 이것은 역대 정부의 <성장정치>의 문제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정치(growth politics)란 정치적 선전이나 동원을 목적으로, 지역성장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저발전국가, 공업적 후발지역, 도시의 슬럼가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정치술수이다. 성장정치의 주체는 관료 및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보통 타당성이 없고, 실현불가능한 발전정책을 통해 오도된 성장이데올로기를 조성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RIS 구축 및 전략산업육성정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입지여건, 자원동원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그러한 원칙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전략을 선택했다. 그들이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분명 <정치적 선전효과>였다. 검증되지 아니한 탈공업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조업 = 낡음, 사양산업, 저생산성, 환경파괴, 노동운동>, <탈공업화산업 = 새로움, 선도산업, 고생산성, 환경친화, 노동해방>이라는 성장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성장정치>를 시도했던 것이다.

3. RIS 유형의 다양성

중앙집권국가의 지방화 전략은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중앙정부가 전략을 주도하고, 그것을 시혜적 차원에서 지방에 분배하는 <지도적, 하향적, 강제적, 그리고 의존적 발전모델>이다. 그러나 RIS 구축전략을 통한 자립적 지방화 모델은 지방이 전략을 주도하고 중앙은 여건을 조성하는 <자주적, 상향적, 합의적, 그리고 내생적 발전모델>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델을 참여정부는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RIS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의 실패를 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RIS 구축 전략의 성공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RIS를 구축할 수 있는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모델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RIS 구축의 기반 여건은 지역마다 상이하다.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SOC와 집합적 소비수단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생산 중심도시와 소비 중심도시, 공업 중심지역과 농림어업 중심지역, 내륙지역과 해안지역 등등의 RIS 구축의 기반여건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 기존 정부는 <탈공업화 산업 중심의 RIS 모델>이라는 단일 모델만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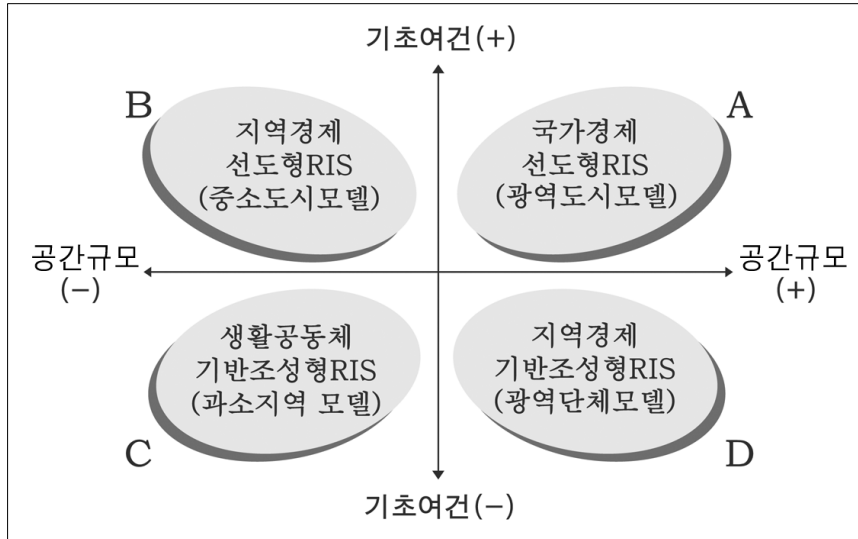
RIS 모델은 이념형적으로 <그림4>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유형화의 기준은 (1) RIS 구축의 기반여건(대학, 연구소, 기업체, SOC, 집합적 소비수단 등)의 조성정도와 (2)공간단위(행정구역, 인구규모 등)의 크기 등 두 가지이다. <그림4>의 A형은 기반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고, 공간단위가 큰 광역도시지역의 모델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국가경제의 중추기능을 이끌고 갈 RIS 모델(국가경제 선도형 모델)이 적절하다. 예컨대, 서울에는 금융 및 유통산업 중심의 RIS, 울산에는 자동차 및 중화학공업 중심의 RIS, 대전에는 R&D 중심의 RIS, 광주에는 문화산업 중심의 RIS, 부산에는 물류 중심 RIS 구축전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B형은 공간규모가 크지 않지만 비교적 기초여건이 잘 구비된 중소도시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목적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지역경제선도형 RIS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주시에는 전통문화 도시화 모델, 군산시에는 자동차부품 산업 중심의 RIS 모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형은 공간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축되는 <농산촌형 RIS 모델>이다. 거의 모든 농산촌 지역은 RIS 구축의 기반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과소지역이다. 따라서 광역단체 및 중앙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공단지 중심의 RIS, 그린투어리즘 및 어메니티 개발 중심 모델, 화훼산업 중심 모델 등을 통해 신활력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D형은 광역자치단체 모델이다. 광역단체는 인구 및 자원의 공간적 분산도가 높은 지역으로 표준화된 RIS 모델 구축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광역단체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관리 및 연구기능을 담당할 R&D형 RIS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도 광역단체는 중앙정부의 전략산업을 위임받고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예컨대, 양성자 가속기 건설 사업이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이 그것이다. 따라서 광

역단체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중앙정부 위임사업과 연관된 전략적 RIS 모델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RIS 유형 및 구축단위

한편, RIS 모델은 구축단위별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예컨대, (1) industrial polis 지향형 RIS, (2) art polis 지향형 RIS, 그리고 (3) eco-polis 지향형 RIS 등의 유형이 그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각급 지자체들이 추진해 왔던 발전프로젝트들의 내용분석에 기초한 것이다(김영정, 2002 참조).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지향하는 발전이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가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화를 도모(industrial polis 지향)하며, 지역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는 조치를 강구(art polis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발전을 지향(eco-polis 지향)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발전의 기본이념과 <그림3>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을 교차시킬 경우, <표2>와 같은 매우 다양한 RIS 세부모형이 조성될 수 있다. 이들 세부 모형은 예시에 불과하다. 지역의 기반여건에 따라 훨씬 탄력적인 모형의 개발이 가능하다. 앞으로 지역단위의 기초 여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천가능한 RIS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하는 첩경이다. 서구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RIS의 중심은 당연히 industrial polis 지향형이다. 세계경제의 지식경제화에 발맞추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어떠한 모델보다도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추구하는 산업의 유형에 따라 (1) 정보집약(과학기술)형, (2) 수요대응형, (3) 전문공급자형, (4) 규모집약형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표2> RIS 세부 모형 및 예시

구축단위별 구축 모델 구분 내용별 모델 구분		광역도시형 RIS (국가경제선도형)	중소도시형 RIS (지역경제선도형)	농산촌형 RIS (과소지역 공동 체 기반조성형)	광역단체형 RIS (지역경제 기반조성형)
industrial polis 지향형 RIS	신산업 (탈공업 화 산업) 추구형	IT,BT,ET,RT,NT, SW,금융,첨단제조 업 육성형	첨단기계/생물벤처 /영상산업 등 지역선도산업 육성형	-	전략 및 지역기반 산업의 R&D 중심형
	전통산업 혁신형	Fordism산업을 중 심으로 한 국가기 간산업 혁신형	기간 중소기업, 신 발, 패션의류, 가 구, 악기 등 지역경제 혁신형	농공단지, 축산, 농업단지 등 육성형	전통산업의 R&D 중심형
art polis 지향형 RIS		문화수도 구축형	예술, 전통문화, 영상문화, 축제 등 개발 및 육성형	지방문화, 문화 유적, 축제 등 개발 및 계승형	지역문화 R&D 및 기반조성형
eco polis 지향형 RIS		환경도시 및 도시어메니티 (am-enity) 개발 형	생태도시 구축, Retirement Community 조 성형	생태관광 및 농촌amenity 개발형	지역환경 R&D 및 amenity 개발형

주1) 유럽 및 선진국의 경우 RIS는 industrial polis 지향형 RIS 중 특히 신산업 중심형에 해당함.

주2) 그 밖의 유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RIS를 범용개념으로 간주하고 구분한 것임.

정보집약형은 미국의 실리콘 벨리의 경우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네트워크,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확산, 완벽한 인프라(기업서비스업) 지원 등과 같은 기반여건의 구비에 따라 형성된 정보 및 과학 집적형의 RIS를 의미한다. 수요대응형은 예컨대, 패션의류, 신발, 가구 등과 같은 전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구되는 RIS 모델이다. 이 경우 전문화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가 핵심적 조건이다. 유관산업의 상호협력 및 학습효과를 통한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3이태리>의 성공이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전문공급자형은 독일의 기계공업의 경우처럼, 중견 및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

으로 독점적 시장지위를 누리는 전문제품을 생산해 내는 RIS 모델이다. 현재 독일의 기계산업은 생산의 60%를 수출하고 있으며, 86년 이래 수출 세계 1위의 놓치지 않고 있다. 규모집약형은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부품업체와의 긴밀한 상호교류를 통해 부품의 공용화를 달성하고, 기술의 공동학습으로 생산의 극대화를 달성하였다.

한편 RIS는 혁신주체(innovative players)의 역할에 따라 (1) 대학주도형, (2) 연구기관 주도형, (3) 기업주도형, (4) 외국인 투자주도형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스탠포드 대학 등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대학주도형의 RIS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주도형의 RIS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기업주도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반도체 및 하이테크 집적지인 Silicon Forest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학 및 연구소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Intel 및 Tektroniks 등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의 중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울산(자동차), 포항(제철), 구미(전자) 등의 경우도 기업주도에 의한 RIS 구축 사례에 해당한다 하겠다. 외국인 투자주도형의 세계적인 사례는 영국 웨일즈의 지역혁신체계를 들 수 있다. 영국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하나인 Wales Development Agency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 Sony, Ford, Nortel 등 300여개 외국기업이 진입해 약 73,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산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Nokia 등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자유무역지역이 마산지역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외국인주도의 RIS에 해당한다 하겠다(국가균형발전추진단,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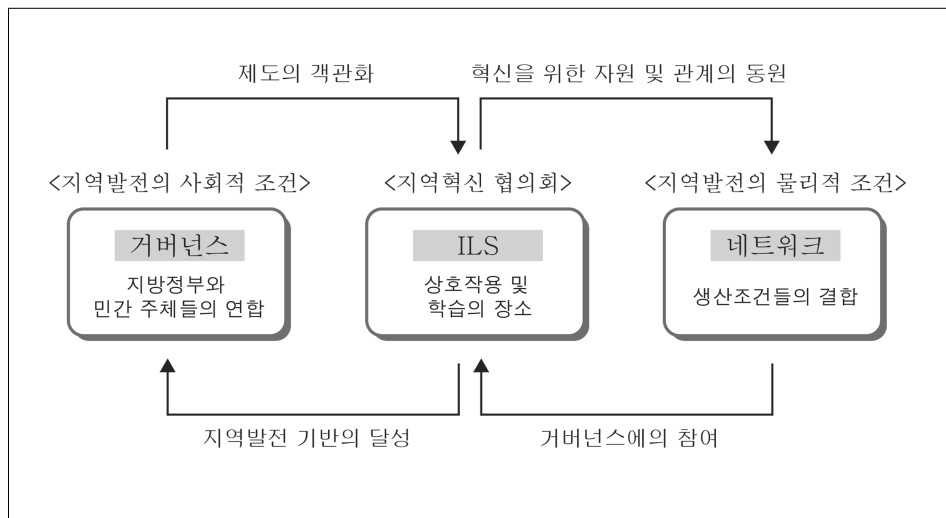
4. RIS 구축을 위한 내발적 조직(지역혁신협의회)의 결성

1) 지역혁신협의회 설립배경 : 이론적 검토

앞서 논의했듯이, 지역 단위의 RIS는 참여주체들의 네트워크와 학습을 통한 혁신역량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점에서 RIS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성장을 구현해 보겠다는 일종의 실험적 모델에 해당한다. 지역은 본래 물질적 단위(material unit)와 사회적 단위(social unit)로 구성된다. 물질적 단위는 지역의 생산환경을 구성하는 조건들의 관계망(생산조건들의 네트워크)을 의미하며, 사회적 단위는 제도 및 참여주체(actors)들의 관계망의 집합(거버넌스)을 의미한다. 지역발전(혁신)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의 성

장을 통해 달성된다. 그러나 양자는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매개하는 조직적(또는 물리적) 조건을 통해 성장한다. <그림5>에서 보듯이, 그러한 조건을 ILS(interaction and learning sites / 상호작용 및 학습의 장소)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Crevosier, 2000, 68-69).

ILS는 지역발전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연구/훈련센터, 전문결사체 등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협의체가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고 주민자치가 철저히 제도화된 선진국의 경우 지역단위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이 ILS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ILS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자생적 조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RIS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방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ILS의 기능을 담당할 조직의 결성이 절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제정하여 지역혁신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조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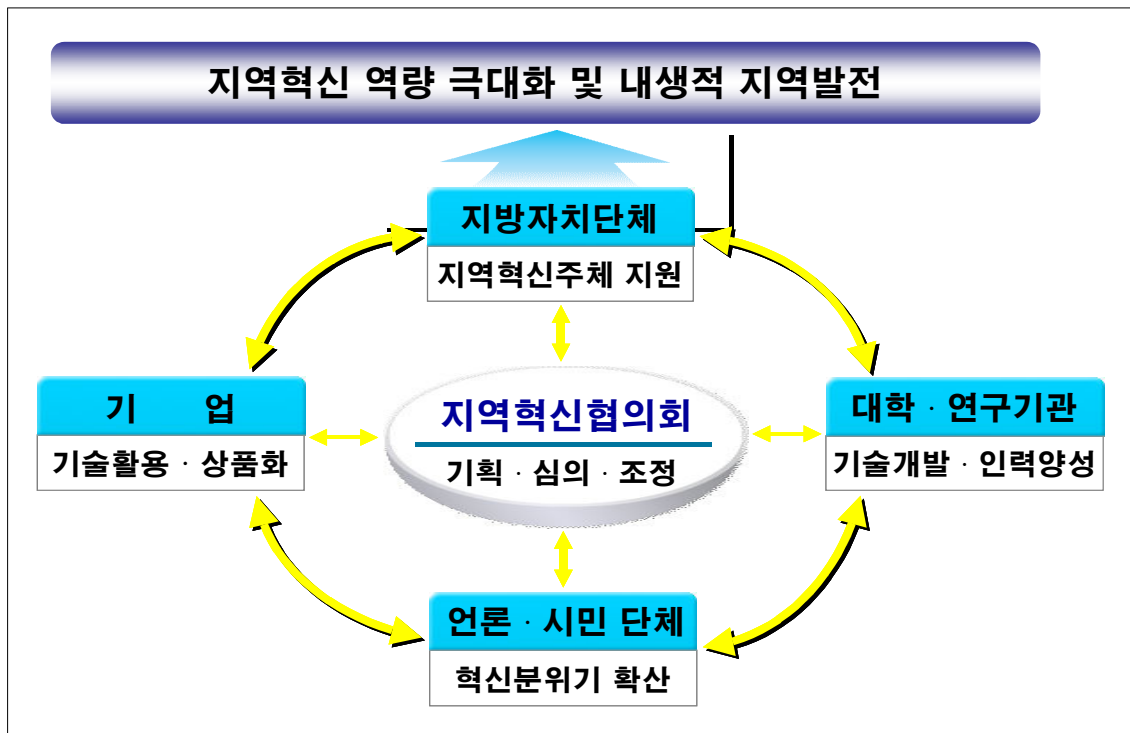


<그림5> RIS구축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

2)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내에 존재하는 산학연관 등 모든 지역혁신역량을 망라한 지역의 대표체계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지역발전의 비전 및 전략수립, 추진과제의 선정,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등 지역단위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1)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RIS 형성을 촉진하는 (2) 형성자 (facilitator)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의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3) 혁신주도자(innovator)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방과 중앙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4)가교(linker)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4가지 임무는 지역혁신의 내부역량 강화 및 내생적 지역발전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한다(<그림6> 참조).



<그림6>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에는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인물들이 참여해야 함이 필요하다. 만약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의 기득권 수호세력들의 ILS로 변질된다면 지역의 <성장정치>가 강화되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성장정치 강화는 <거버넌스> 구축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판받고, 배척되어야 당연하건만,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다. 지역내부의 각종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소위 ‘토호세력’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비공식 네트워크(반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발전 아젠다를 독점함으로써 기득권을 강화한다. 그들은 균형발전의 문제를 합리적, 실천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접근한다. 예

컨대, 자립형 지방화의 논리를 수도권 배제의 논리로 해석하려는 주장이나, 공업적 후발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전제되지 아니한 균형화 전략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성장연합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지배 레짐(informal ruling regime)>을 구성한다. 이는 그릇된 성장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지대추구행동(rent-seeking behavior)을 강화하는 세력 및 지역의 각종 이권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려는 무형의 이익집단을 지칭한다. 이들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배할 경우 RIS 전략과 자립형 지방화 전략은 달성될 수 없다.

3)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현행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지역혁신협의회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각각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다. 즉 광역지자체들이 연합하거나, 2-3개의 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생활권-경제권-행정권역 중심의 초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도 협의회의 경우, 2003년에 대구·경북(6. 25)과 충북(11. 17)이 창립된 이후 서울시가 최종 창립('04. 5. 28)되어 현재 전국 14개의 광역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 중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초광역으로 구성되었고, 기타 12개 시·도는 단위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시·군·구 기초 협의회의 경우 2005년 5월 현재 111개 지역이 결성을 마쳤다.

협의회 위원은 광역협의회의 경우 전국 총 725명('04.9.30 현재)이며, 학계(30%), 산업계(10%), 연구원(7%), NGO(7%), 공무원(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협의회(본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또는 분야별)로 4~5개의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경우에는 본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별 분과위원회 현황(2005년 2월 현재)은 <표3>과 같다.

4)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원칙과 활성화 과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방(government) 위주의 통치방식에서 민·관간 협력에 기초한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을 지역단위에서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다음의 원칙이 보장될 때 실천될 수 있다.

(가)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기관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방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bottom-up 철학의 존중)

(나)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방안 구축, 공감대 형성, 전파 등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지역혁신에 대한 공론 문화의 창출).

(다) 지역주민과 기초단체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결사체거버넌스 확립).

(라) ‘정권과 단체장’의 교체 여부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정권과 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지속가능한 제도 정립과 실천).

<표3>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 현황

지 역	분 과 협 의 회				
	정책개발	금융/IT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미래전략산업	-
서 울	정책개발	금융/IT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미래전략산업	-
부 산	기획조정	인적자원개발	전략산업1	전략산업2	과학기술
대구·경북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균형개발	주민참여
인 천	기획조정	대학육성 및 인력개발	과학기술	전략산업	물류산업
광주·전남	참여 및 홍보	인적자원개발	지방산업	지역특화발전	지역기반조성
대 전	기획조정	인적자원개발	전략산업	과학R&D	-
울 산	기획조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전략산업	과학기술	-
경 기	기획조정	과학기술	지역산업	수도권정책	-
강 원	기획조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략산업	지연산업	문화관광산업
충 북	지역산업	지방대육성 및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SOC구축	-
충 남	기획조정	지역인적자원	과학산업	농업바이오	문화관광
전 북	기획전략	인적자원개발	미래성장산업	생물산업	문화관광영상
경 남	기획조정	지방대및과학기술	전략산업	지역개발	-
제 주	기획홍보	인적자원개발	지역전략산업	제주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준수가 곧 협의회 활동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 <표4>에 제시된 구체적인 과업들이 완수될 때 비로소 협의회 활동은 활성화될 수 있다.

<표4>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과제

활성화 과제	세부과제
(1) 협의회 위상 정립 (PRESTIGE)	□ 법정 기구로서 협의회 지역사회내 위상제고 필요
(2) 협의회 혁신성 제고 (INNOVATIVE COMMITTEE)	□ 지역 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혁신성 제고 □ 위원 대상 학습 프로그램의 다원화
(3) 역할과 책임 강화 (EMPOWERMENT)	□ 협의회 심의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심의·평가 참여 □ 연차보고서 작성 참가 및 박람회 개최 □ 지역내 혁신교육 등을 통한 공동학습 전개
(4)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SUPPORT MANAGEMENT)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과협의회 운영 □ 사무국의 인력 및 재원 확대
(5) 대외적 협력강화 (PUBLIC RELATION)	□ 국가균형위와의 협력적 관계 확대 □ 시도와의 적정한 관계 정립

1) 지역혁신협회의 위상 정립

지역혁신협의회는 종래 정부가 주도하여 결성한 임의적 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기구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기존의 정부의 임의 위원회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 정부의 이러저러한 위원회와는 달리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도지사, 공무원, 협의회 위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각급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협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업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차원의 “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민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협의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2) 협의회 혁신성 제고

지역 혁신의 중추역할 수행 주체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혁신성 강화)이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 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반거버넌스 네트워크>로 전략할 경우 지역 혁신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표5>와 같은 교육·홍보 활동을 기획, 실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협의회 혁신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표5>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성 제고 교육프로그램

대 상	학습 내용
의장단	국가 경영철학 및 전략
협의회 위원	균형발전 주요정책 및 전략
분과협의회 위원	인적자원, 전략산업 등 분과협의회에 특성화된 교육
사무국 직원	협의회 의제 발굴, 기획능력 향상 등

3) 협의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 조정하듯이 협의회는 지역차원에서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지역의 혁신자원 결집을 통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시스템 통합자(System Integrator)와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해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밖에 중앙정부의 관련업무 지침에 의한 심의 기능(NURI사업, 산학협력사업, RIS 시범사업,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지역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산업기반 조성 사업, 지방과학 연구단지 조성 및 전문대 특성화 사업의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그 기능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수립 「심의」 및 「자체평가」 기능이 주어져야 하며, 지역전략산업과 자연산업,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임무 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내 공동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 분위기 확산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임무도 부여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 사무국은 법적 업무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넘어선 보다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4)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혁신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과협의회와 협의회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가) 본협의회와 분과협의회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예컨대, 본협의회는 지역혁신발전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지자체와의 의견조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분과협의회는 구체적인 지역혁신사업의 발굴, 창의적 아이디어의 제공, 그리고 전문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분과협의회와 시·도 실국간 업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과협의회 의 의제 발굴 촉진,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시도 실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공유, 정기간담회 등이 필요하다.

(다) 효율적 분과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체혁신이 필요하다. 분과협의회위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없이 자립형 지방화를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한 분과협의회 내부혁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라) 협의회 사무국 정비가 필요하다. 사무국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기구이다. 회의준비, 안건작성, 협의회 기능과 관련된 전문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이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설립방식이 다양하고, 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지원 방식이 차별적이며, 법인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특히 법인격 부여 문제는 사무국 정체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 법인화 추진(민법 제32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인가)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5) 대외적 협력 강화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도, 타지역의 협의회, 그리고 국가균형위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균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균형위는 이

의 촉진을 위해 격월제로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의회 활동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지역혁신연구회>의 구성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시도지사와 협의회 간의 정례 간담회도 주선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공간구성과 균형발전전략.
 _____, 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_____, 2004.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안)”
 국가균형발전추진단, 2003, 효율적인 RIS구축방안과 정부의 역할.
 김영정, 2001, “반지역통합레짐과 지역감정,”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여음), 한국사회학평론 제7집, 한울
 _____, 2001, “지역 NGO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제3호.
 _____, 2002, “지역정보화와 지역발전의 관계” 지역사회학 제2집, 지역사회학회.
 _____, 2002.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정치,” 지역사회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_____, 2003.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동향과 전망> 59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김학동(역), 2001. 제조업은 영원한가, 지식여행.(Eamonn Fingelton, 1999. In Praise of Hard Industries, The Spieler Agency.)
 김형기, 2001, “지방분권과 대안적 지역경제발전 모델,” 이정식, 김용웅(여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박삼육, 2001, “산업군집 형성과 지역산업 발전”, 이정식, 김용웅(여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백두주, 2001. “부산지역 성장정치에 관한 사례연구: 삼성자동차 부산유치 및 매각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 경남대 사회학과.
 성경룡, 200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분산전략” 2002년 가을 지역사회학대회(충남대학교, 2002년11월21-22일) 자료집,
 _____,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오현석, 김정섭(옮김), 1999.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OECD, Cultivating and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최용호, 2001, “지역혁신체제의 특징과 구축방안”, 이정식, 김용웅 여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한림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 『춘천리포트』. 나남.
 한상진, 1999.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지방정치,” 한상진 저, 도시와 공동체(한울) 제8장.
 황한식, 1995.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역사회연구 3집, 한국지역사회학회
 Crevoisier, Olivier. 2000. "Innovation and the City," in Edward J. Malecki and Paivi Oinas (ed.), Making Connections, pp 61-77.

- Cox, Kevin R. 1997. "Governance, Urban Regime Analysis, and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Mickey Lauria(ed.), Reconstructing Urban Regime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 Edquist, Charles, 1997,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es: Their Emergence and Characteristics in Systems of Innovation, London, Cassell Academic.
- Horan, Cynthia. 1997. "Coalition, Market, and State: Postwar Development Politics in Boston,"in Mickey Lauria(eds.), Reconstructing Urban Regime Theory, Sage Publication, Inc.
- Logan, John R, and Harvey L. Molotch, 1987, Urban Fortunes, Univ. of California Press.
- Logan, John R. Rachel Bridges Whaley, and Kyle Crowder, 1997. "The Character and Consequences of Growth Regimes: An Assessment of 20 Years of Research," Urban Affairs Review 32(5).
- Lundvall, B. A.(ed.), 1992,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inter, London.
- Mollenkopf, John, 1983. The Contested C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Molotch, H. 1976, "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2).
- Nelson, R. (ed.), 1993,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Univ. Press.
-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New York.
- _____. 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1).
- Stone, C. 1989. Regime Politics: Governing Atlanta, 1946-1988, Lawrence: Univ. Press of Kansas
- _____. 1993. "Urban Regime and the Capacity to Govern: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Journal of Urban Affairs 15(1).